

“긴급돌봄, 교사 학부모 모두 고통”

■ 도의회 24일 제3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코로나19 관련 도교육청 대응 준비부족 질타 “긴급돌봄 18~19명이 한반에... 거리두기 무색”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전 준비가 부족해 학부모 불만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주도정이 코로나19 사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심각단계를 선포했을 때 교육청도 기능을 못 하게 된 직속기관 인력 등을 신속히 모아 전담 대응팀을 꾸렸어야 했다”며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교사로 추진팀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했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 전에 담임 교사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도 있다”며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해 반반의 준비를 했다는 교육 당국의 자신감과 달리 교육청 안팎의 온도차가 극명하다”고 했다.

개학이 연기되며 초등학교 등에서 긴급돌봄이 운영 중이지만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활용해 (긴급 돌봄 교실 내) 원격 학습을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 교육 당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력 지원에 미온적”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긴급돌봄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의 학급 당 인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해 학생을 분산 배치하도록 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러한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제주도 2도2동갑) 의원은 “긴급 돌봄을 위해 224개 반이 편성됐는데, 이 중엔 18~19명이 한반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긴급돌봄 참여율이 크게 늘었다”면서도 “긴급돌봄 학급당 학생 수를 다시 한번 살펴줬다”고 답했다.

유·초 1~3 긴급돌봄도, 무상급식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긴급돌봄 교실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긴급돌봄 대상 가구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임을 감안해 급식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은 2만6738명으로, 이 중 지난 3월 2일 기준 2553명(9.5%)이었던 긴급돌봄 신청학생은 4월 16일 기준 7851명으로 증가했다. 오은지기자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해무리 화창한 날씨를 보인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설치 작품 위로 해무리가 관측되고 있다. 해무리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굴절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희만기자

“제주, 신규 임대사업자 1인당 3호 소유”

국토부 전국 등록자 분석 337명이 1017호 주택 등록

올해 1분기(1~3월) 제주지역의 신규 임대사업자의 1인당 임대 세대수가 3호 가량으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은 전국적으로 사업자 2만9786명에 주택 6만1624호에 이른다. 전분기(지난해 10~12월, 2만2000명) 대비 신규 임대사업자는 37.1%, 임대주택은 전분기(4만1000호)에 견줘 52.1% 각각 늘었다.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이며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호에 이른다.

1분기 제주의 경우, 임대사업자 337명에 등록주택은 1017호다. 1인

당 3호 가량을 임대한 셈으로 이는 전국평균의 1인당 2.1호를 소유했던 것보다 1호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연계,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기한(2020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영탁기자 haru@halla.com

제주형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장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서 출생연도 5부제로 진행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특히 제주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DB와 행정정보공동이용병행심사를 통해 27일부터는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5부제도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되는 5부제는 5월 8일까지 적용되며, 오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시설노후·포화상태 제주교도소 증축

현재 수용률 정원의 130% 2개동 증축공사 용역 공고

늘어나는 재소자에 비해 감방이 모자라 포화 상태에 놓인 제주교도소가 결국 증축을 추진한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제주교도소는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공사 설계 용역’을 지난 3일 입찰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교도소는 6만8141㎡의 교도소 부지에서 창고를 포함한 기존 건물 5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여성수용동 1동(1294㎡)과 미결수 수용동 1동(1750㎡)을 증축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비는 4억2000여만원, 증축 예산은 90억여원으로 계획됐다.

1971년 10월 문을 열어 준공된지 49년이 된 제주교도소는 늘어나는 재소자에 비해 감방이 모자라 매년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교도소의 수용률은 지난 2014년 120%를 넘어선 데 이어 2017년에는 125%로 늘었고, 현재는 130% 안팎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이 들어가는 수용실에서 13

명이 생활한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교도소 내 수용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재소자를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밀화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앞선대담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유행하자 제주교도소는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다만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증축은 노후된 시설 개선을 포함해 재소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일 뿐, 코로나19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1인당 수용 면적이 정확히 얼마큼 개선될지는 설계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쓰시는 제주도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영산불교 현지사 제2본산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조천 만세동산 옆)
■ 전화: 064)783-5355
■ 팩스: 064)784-5155